

당장은 환자 곁 떠나지 않지만...환자들은 불안 가중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첫날 표정

전남대·조선대 40여명 사직서 제출 속 의료현장 지켜 큰 혼란 없어
근로시간 준법투쟁 시작...진료 예약일 남았는데 병원 찾는 환자도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5일 광주지역 상급병원에서 큰 의료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함께 준법투쟁(52시간 근무)을 감행하자 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예약날짜가 다가오기도 전에 병원을 방문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양 대학 의대교수 4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비상대책위와 의대교수평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전남대 비대위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조선대 비대위는 다음달 1일까지 사직서를 받을 예정이라 당분간 시작처리되는 의대 교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큰 혼란이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공의들이 이탈한 그동안의 의료현장 모습이 이어졌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지만,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오전부터 병원 로비에는 예약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외래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다.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도 시작됐지만, 첫날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일부 교수들은 "언제든 환자를 봐야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히 52시간을 어떻게 지키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한 달 여 동안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준법투쟁이 장기화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날마다 또는 짧은 순환으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교수들이 준법투쟁으로 언제든 당직근무제외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극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5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사직서 수리 전까지 필수의료·중증·응급 진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52시간 준법근로 투쟁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필수분야를 제외한 일부 과에서는 축소진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에 따라 수술이 연기돼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은 여전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전대병원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 취소당했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자는 "딸이 종양 수술을 받기위해 2주 전 날짜를 잡고 검사 다하고 일요일에 입원할 예정이었는데, 응급수술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마취과에서 못해준다고 해서 취소됐다"면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수술 예약하려면 외래 또 가야하고 검사도 다시 해야해서 짜증난다"고 하소연했다.

다행히 외래진료까지 차질조짐은 발생하지 않고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25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에서 환자들이 누워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있지만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소식에 치료를 받지 못할까 크게 우려했다.

어머니가 아파 25일 전대병원을 찾은 김모(여·61)씨는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수술을 받고 그동안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일단 다음

달 예약은 했지만 교수들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료 예약일이 20여일 남았음에도 불안감에 병원을 찾은 환자도 있었다. 지난달 수술을 받은 신모(69)씨는 "수술 후 진료

예약일이 4월 17일이지만 교수들 사직 소식에 걱정돼 예약 없이 미리 왔다"면서 "수술 후에 혹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교수가 사직한다니 불안해 잠을 못 자겠다"고 토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4억여원 잘못 부과 광주시, 이자·손해배상금 등 2억대 지급해야

재건축정비조합 일부 승소 판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광주시가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에게 2억2900여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조합은 지난 2019년 4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급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는 A조합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4000여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 7000여만원 등 총 14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해 4월 26일 납부받았다.

A조합은 지난 2020년 1월께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부담금은 이종부과에 해당하고 급수공사비 부과도 무효인 고시에 근거해 진행했다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지난해 2월 확정받았다.

광주시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A조합에게 14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조합은 해당 금액을 광주시가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무효판결 확정일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담금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이므로 광주시가 부담금 합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동킥보드, 차량 앞에 지속적으로 세워두면 무슨 처벌?

광주지법 "불안감·공포심 유발...스토킹 범죄에 해당"

전동킥보드를 타인의 승용차 앞에 지속적으로 세워 운행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32)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오후 6시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49)씨의 차량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

이후 6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A씨 차량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세워 차량을 막았다. 1대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4대에서 12대까지 주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께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기간 반복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 아파트 화단서 중학생 숨진 채 발견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경찰과 순천소방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순천시 해룡면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 A

(15)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29층 높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A군은 "사람이 차 위로 떨어졌다"는 행인의 신고로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

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A군이 혼자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유서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학교폭력, 가정불화, 정신병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